

시론

대학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빅찬 숙제 무리하다 쓰러질라

오세운

(대학주보 편집간사)

단국대가 지난 6일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각 대학들은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많은 의견들과 획기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그대로 '대학 무한경쟁 시대'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거품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최근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교육열에 편승하여 대학의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한 결과이다. 무리하게 정원을 늘림에 따라 대학은 거대화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예산의 확대를 불렀다. 이에 따라 인원을 또다시 증원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극복하지 못한 일부 대학의 경우 경제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의 완전 자유화는 신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대학간 과잉경쟁에 의한 소모전은

대학개혁에 도움될 수 없다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대학의 완전 경쟁체제를 구현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대학의 경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도태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그동안 교육개혁 1위를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물론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의 개혁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신정부 출범 이후 강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듯하다.

각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대학의 측

면에서는 강변적인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성급하게는 대학간 빅딜을 주장하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수임용비리사건까지 포함하면서 과장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학생수의 감소, 외국대학을 필두로 한 교육시장 개방은 경제위기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가상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의 변화들이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창업형 인재의 육성, 시간제 학생등록, 사회 교육원 등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전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수의 감소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는 대학들의 확대는 경쟁력이 약한 대학의 경우 도태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완전자유화는 그동안 잘못되었던 대학사회의 관행들을 일소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대학 사회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작용하는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대학간 무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과열경쟁 옳지 않다

국가 전반적인 경제위기는 대학

사회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물론 대학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살아남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대학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으로 흐르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소모하는 결과만을 양산할 뿐이다.

구조적으로는 대학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후죽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 속에서 서로간에 이루어지는 무리한 소모전은 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소모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 방안으로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와의 위상 강화는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모여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양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학교육협의회와의 역할을 재정당한다는 방안이다.

대학사회는 더 이상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이 없다. 그만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간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더 이상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강변조의 말은 용인되지 않는다.

사설

21세기 명문대학으로의 발돋움

여기저기 움을 띄우는 꽃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낭보가 들려온다.

우리학교 수원캠퍼스가 지난 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500점 만점에 485.05를 획득, 26개 대학 중에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은 이 쾌거는 94년부터 실시된 대학종합평가 사상 최고의 점수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등 6개 영역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제반 교육환경이 고르고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우리 학교 수원캠퍼스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각계의 지난한 노력이 숨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대학원 지정, 가상대학 실험운영대학으로 각계의 주목을 끌었고, 경기도 컨소시엄 지정대학, 정보통신부 창업지원센터 선정, 언론사 주관 평가 우수대학 선정 등 학내외적으로 최우수 실적을 얻은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36개국 148개교와 해외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국제화 선도도 큰 공로로 꼽혔으며 LG, 제일화재 등 기업과의 적극적인 산학협동을 통한 발전기금 조성에서도 재경년에 고민하는 다른 대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늘의 쾌거는 단순히 평가를 염두에 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21세기 최우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학개혁의 거시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수, 직원,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공과라는 점에서 더욱 빛난다. 그 결과 최고점을 상회하는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 시설설비 영역에서의 최상의 수준 확보, 계약교수제도 국내 최초 도입, 교수업적 평가제도 실시, 입시의 다양화 및 특성화 등 많은 개혁을 이루어 냈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는 우리학교 수원캠퍼스가 지방 캠퍼스가 지닌 한계를 적극적인 교육여건 개선으로 극복하여 제2캠퍼스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실리위주의 교육환경과 특성화된 지방캠퍼스 체제가 입시에도 장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평가제 이후의 내실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수치 위주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면 '최우수대학'이라는 명예에 걸맞게 알찬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대학의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구조조정, 특성화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21세기 초 명실상부한 국내외 최고명문대학으로 성장기 위해 바쁜 행보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일이다.



세시봉 양심수 사면, 인권시대의 초석

"저는 누구일까요? 제 이름은 신문지상에 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없구요, 그렇다고 남의 재산을 노려 사기를 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차가운 창살 안에서 지낸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군요."



최현일 사회부장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단행된 특별사면의 범위가 아직도 미정인 모양이다. 특히 황석영, 백태웅, 박노해씨의 석방은 우리의 관심사인 동시에 국제인권기구의 주목사항이기도 하다. 양심수문제의 처리는 '국민정부'가 소위 '문민정부'와 과연 얼마나 다른가를 보는 시금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시금석의 존재조차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등 시국사범 가족들은 3.1절에 맞춰 단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면복권 조치가 무산되자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민가협과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석방을 요청한 공안사범 5백17명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벌인 끝에 단지 70~80명의 석방대상자 명단을 김 대통령에게 제출했을 뿐이다. 이는 석방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과거의 사상을 분명히 포기한 자"라는 과거 정권의 기준을

적용했다. 그런 논리를 따른다면 각각 무기징역과 23년 6월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제청했던 말인가.

대선이 있기 전 민가협 주최의 '양심수에 관한 대 토론회'에서 국민회의의 한 의원이 "양심수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김대중 총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김총재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양심수를 금방이라도 사면할 것처럼 보였던 그때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양심수 사면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전이 아니다. 양심수문제를 정략적, 편의적 발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인권의 문제는 타협 가능한 항목이 아니며, 양심수 문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말한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과는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또한 하루 속히 양심수의 대폭사면을 통하여 '인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PC 통신원

한국인의 외제 혐오증

19세기 말, 서양배가 조선의 해안에 들어왔을 때, 조선 백성들은 그들의 문물을 거부했다.

개방 후 1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나게 수입한 외제 물건들을 맞아 또다시 거부하고 있다. 스프레이 페인트 세제를 받은 외제 차, 멀쩡히 내다 버려지는 초등학교생들의 외제화용품 등등.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수난을 당하는 외제상품은 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무역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외제 혐오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C 통신 하이텔에서는 '국산품 애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산품 애용에 대한 반대 의견에는 요즘 국내 분위기와 같은 무조건적인 외국상품 배척은 자칫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과 (ID: BYdemnad) 맹목적인 국산품 애용은 국내 기업의 빈약한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ID: stsilver)

반면 국산품 애용이 국내 기업의 도산을 막는 것이라는 의견(ID: 5397248), 그리고 외제하면 연상되는 것은 '물방울 다이아몬드', '백반 불양주' 등이 아니라며 외제사용에 크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의견도 있었다. (ID: TTOTTO)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외제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는 사회풍조는 맹목적인 국수주의가 되기 십상이고 국수주의가 만연할 때 무너진 한국 경제는 일어설기 힘들다. 현대와 같은 자유무역경제 체제에서 1세기전 쇠국정책을 재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국산품을 보호하기 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수윤 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Samsung. It features a black and white close-up of a man's face on the left. The text reads: '그대는 이 나라의 미래!' (You are the future of this country!), '실력을 쌓으라.' (Build your skills.), '경제위기는 선배들이 맡겠다.' (The economic crisis will be handled by the seniors.), and '20만 삼성인이 총력을 다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200,000 Samsung people are putting their full effort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e Samsung logo and name are at the bottom right.